

당정, '손실보상법' 제정... 16개 업종 과거 피해까지 지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법 제정
소급적용 대신 피해업종 범위 넓혀
여행·공연업 등 피해지원 길 열려
오늘 산자위서 야당과 방식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를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

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워런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혀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제

정 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피해심사위원회를 두고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심사해 과거 피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신 피해심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피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길이 열렸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가 추진한 기존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재정부담이 크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신속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을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야당과 협상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중소 수출기업에 물류비특별용자 3천만원

정부,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의 물류비 특별용자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와 선박 확보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9건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분석한 결과 선박공급 확대(39%),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에 이어 올해 5월 '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등과 협조해 미주항로 선박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해 7월부터 미국 운항 임시선박을 월2회에서 월4회로 증편 투입하고, 7월초엔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마산항'→'LA항'→'휴스턴항'의 미주항로를 운항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文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해야"

문 대통령, 전담기구 설치 지시
"軍 국민 분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민간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후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사고와 관련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이 되어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범 시점도 빨리 발족을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산재비용 부당전가 제조업체 직권조사

공정위, 제조업 분야 확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 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30세 미만 장병에 코로나백신 접종 시작

국방부, 77.2만명 대상 6주간 실시

국방부는 다음달 17일까지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접종대상자인 41만 4000명의 장병과 군무원 중 접종동의를 한 35만 8000명(3일 기준·전체의 86.5%)이 6주간 군군 병원, 사단급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앞서 군 당국은 사전안내문 및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군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반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30세 이상 장병 접종 시와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전담팀(24시간 전화응대)'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접종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전역 전 휴가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속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접종할 수도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전군(약 55만명) 중 약 87%(약 48.3만명) 접종이 가능해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 목표(80%)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군 재적인원은 58만명, 이중 전역 전 휴가자·전직지원교육자·휴직자를 빼면 총원은 55만명이다. 서 장관이 말한 전군에는 공무원군근로자, 외국군 중점 희망자도 포함된 현황이다.

30세 이상 장병 1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다음달 19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 예비군들에 대한 백신접종까지 이뤄진다면 군사훈련의 제약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n@